

Hansun Brief

발행일: 2017년 4월 11일(통권43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새판 짜기는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장, 한림대학교 교수)

요약

경제, 안보, 외교위기에 대통령 리더십 위기까지 겹치고 있는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갈라파고스의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전인미답의 공동체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제3의 길을 향해 판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결국 유권자들 수준'이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대선후보를 선별했으면 한다. 인수위도 없이 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 비상시국이다. 수권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판을 건디어낼 주춧돌인 개헌을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만이 아니다. 기본권 신장, 실질적 지방분권은 물론 개념조차 애매한 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재정의는 물론 현행 소선거구제도도 함께 바꿔 보수의 가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가개조와 무상복지 공약을 함께 남발하여 병 주고 약 주는 후보를 가려내야 하고 국가재창조의 로드맵과 재정 금융 규제철폐 등에 의한 격변장치를 담은 집권 초 '100일 계획'으로 공약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적폐 청산에만 매달려 미래가치를 구현할 매니페스토는 실종되었다. 개헌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를 알 것만 같다.

구체적으로 노동 등 5대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별 맞춤형 미시적 개혁,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부의 전략적 인프라 정비 등 개혁과 성장의 연쇄반응이 뒤따를 것이다.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거버넌스도 주주중심에서 핵심종업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오너 독단경영, 귀족노조 행패와 정부개입을 차단하고 기업성장과 생애에 걸친 공정보배가 양립되는 기업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자신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꿈을 앗아가는 합법적 아동학대(Child Abuse)가 자행되는 대의제민 주주의 결함을 시정하려면 청년세대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하여 저출산대책,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생산성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 중장년세대로 하여금 세대 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인구 보너스 시대 설계된 연금, 건강, 요양 등 사회보장시스템 개혁에 동참하여 증세 등 응분의 부담을 하도록 요구하는 지도자를 찾아내자.

북한의 무분별한 동시다발 핵실험, 미중일 주변3강의 무차별 대한 강경노선 및 중복세력의 준동에 맞서 자강, 동맹, 균세(均勢)전략, 민관의 공공외교 정책과 통일의지로 안보주권을 지켜낼 위기관리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있다.

무릇 대선 후보라면 이런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정치공학에만 몰두하면 나라만 불행해질 뿐이다. 유권자는 두 눈을 부릅뜨고 후보를 선택하고 임기 중에는 한 눈을 감고 기다려보자.

2017년 대선 한 달 앞이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로 나가는 갈림길에 서 있다. 촛불과 태극기에 모였던 광장의 외침은 한결같았다. 결코 대통령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도 나라냐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국격을 바로 세워달라고, 그럼에도 집회후 반으로 갈수록 그 순수한 외침은 일부 변질되기 시작했다. 국민을 선동해 사익을 챙기고 국익을 무시해온 기득권 패권세력들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소아적 정권쟁취와 패권정치에서 벗어나 공동체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자신의 책략으로 국민을 설득하려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자, 혁신선도자를 찾을 수 없다. 이제는 수구적 패권세력은 과감하게 도태시켜 나라의 판을 바꾸어야 할 때다. 흔히들 나라꼴을 말하면 전제군주국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서슬 퍼렇던 독재정권 핏박 속에서 고도성장과 민생안정을 실현했던 국민국가 건설 당시를 연상하기 싶다. 그래서인지 베고폼 때문에 그 아픔을 참아냈던 산업화 세대는 이윽고 찾아온 1987년 체제 30년의 과잉민주주의 폐단을 우려하며 지난 시절에 오히려 향수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다. 2017년 체제 구축에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가 똑똑해야 한다. 인수위없이 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 비상시국임에야 두 말할 나위없다.

제3의 길을 향해 국가재창조로 새판을 짜야

이제 우리는 자유, 공정, 법치가 살아 숨 쉬는 전인미답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제3의 길을 향해 판을 바꿔야 한다. 2017년 체제를 위한 개헌이야말로 그 새판을 건딜 주춧돌인 셈이다. 그러나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권 신장, 실질적 지방분권은 물론 헌법 119조 1항(자유와 창)과 2항(경제민주화)도 관련 용어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자유, 공정, 관용, 연대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도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GATT-IMF체제, 한미동맹, 선진국 시장개방으로 수출주도 고도성장이 가능했고 기초인프라 투자와 정경유착으로 이권을 배분하며 3류 정치를 허용했던 것이 국가중심국가 건설 제1의 길이었다. 우루과이 통상협상과 WTO 출범과 함께 다가온 개방의 물결 속에서 이미 1989년부터 시작된 10년 주기 경기순환의 하강국면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각종 개혁과 개방을 서둘렀던 나머지 IMF위기를 자초하고 승자독식으로 양극화를 허용한 신자유주의가 제2의 길이었다.

2000년대 초반 10년 주기 경기순환의 완만한 상승국면에서 진보와 보수정권이 잇달아 경제영토를 확대했고 세계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소수 재벌기업 중심으로 세계시장 쉐어가 높아졌다. 그러나 양극화 심

화, 연이은 북핵·미사일 개발, 이념갈등, 대외관계 악화 등 각종 대내외 불안요인을 자초하면서 저성장 국면을 앞당겼다. 이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도 청년실업,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갈등 속에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실종되었고 과잉민주주의 탓에 걸려 소중함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 끝내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으로 자멸하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일본의 아베 정부는 20년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이제는 청년들 일손이 부족한 상황으로 반전했다. 그리고 전시동원을 가능하게 했던 소위 1940년 체제의 유산을 이어받은 전후 고도성장의 틀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다했고 그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해 가고 있다. 나라꼴을 바로 세운다면서 전전의 교육칙어를 미래세대에 주입하며 국가주의로 회귀하는 일본보다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뒤쳐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실리보다 명분, 기회균등보다 결과평등, 사후구제보다 사전규제를 중시하는 사고와 행동이 문제이다. 이른바 국민의 '경제하려는 마음'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몰입(Credible Commitment)으로 정권은 바뀌어도 정책은 이어가는 강력한 리더십과 약자배려와 연대의식이야말로 보수의 가치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제3의 길이다.

청년일자리 부족, 양극화와 세대 간 갈등 심화, 가계와 국가부채누적, 보호주의적 통상환경에다 북핵·미사일 도발 지속 등 경제 외교 안보의 3중 위기가 10년 주기 경기순환의 하강국면과 대통령 리더십부재와 겹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현재 주요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보면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진보와 보수 간의 차이, 지자체 경영경험자와 그렇지 못한 주자 간에 차이가 있지만 그다지 유의미하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공약의 정책적 의미, 효과와 문제점, 실현성,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끝내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공약들

이 많고 대부분 총선 공약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적폐청산에만 매달려 총선과 대선 의미도 구분 못하고 미래가치를 구현할 메니페스토는 실종되었다. 개헌할 이유가 없다. 일단 표만 된다고 판단되면 막무가내로 나열하고 집권 후 수정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집표행위가 어느 샌가 우리 정치권에 통용되기 시작된 듯하다.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바보야 정치공학이야!', 유권자 수준이 그 정도인 것을' 하는 푸념은 이제 끝내자.

우리 시장경제시스템의 내재적 모순과 개혁 방향부터 공유해야

1인당 소득 3만 달러 갈딱 고개에서 10년 이상 허덕였다. 중진국 함정에서 탈피하기 위해 정치권은 나눠먹기식 사익추구에서 벗어나 대의를 위한 치열한 정책 경쟁에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유권자들은 우리의 경제사회시스템의 내재적 모순과 개혁의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목민관을 선별했으면 한다.

첫째, 유권자들은 국가개조와 무상복지 공약 앞에서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병주고 약주는 꼴이다. 언필칭 국가개조를 서두르면 해고와 도산이 불가피하고 내수절벽은 더 가까워지며 무상시리즈 남발하면 노동의욕 감퇴와 모럴 헤저드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몰릴 것이 뻔하다. 이러한 험로에서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국가재창조의 로드맵과 재정금융 등에 의한 격변장치를 담은 집권 초 '100일 계획'을 제시해야 옳다. 공약은 필요한 재원조달, 우선순위는 물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까지도 흡수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비전과 정책만으로는 곤란하다. 이미 1990년대 초반 두르러지기 시작한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혁이 절실할 때도 구체적인 개혁의 로드맵이 없이 슬로건만 요란했었다. 시장실패를 교정해야 할 정부의 졸속, 땀질, 능력 대응으로 정책실패만 누적되고 그 만큼 시장경제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 약화되었다.

이제라도 대선주자들은 자신의 개별 공약에 대한 튼튼 경제, 건전재정, 지속가능복지의 3가지 경제운영 목표의 상호조화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

둘째, 과도한 국가 개입을 이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요체인 우리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국익을 빙자한 정부가 여전히 구시대적인 보조금 행정에 몰두하다 패가망신하면 민간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무정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 간 정보비대칭성이 날로 커져가고 40대 이후 공무원의 직무능력이 OECD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음에도 반기업 정서와 정의조차 불명확한 경제민주화 구호에 현혹되어 청년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찾아 주겠다면서 대기업총수 구속과 유전무죄식 방면을 일삼으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정부의 영이 서지 않는다. 왜 싱가포르 공무원같이 소수 정예로 일 많이 할 터이니 보상 더 해달라는 요구는 없는가. 부당 불공정 거래의 거의 대부분은 과당 경쟁에서 유발된 것이며 결국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잉중복 규제는 정부 실패의 산물임을 잊고 있다. 현재도 시행령 등에 의한 190개 이상의 입구와 출구에 대한 과잉중복 규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은 반기업 정서에 기대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근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등을 포함하는 상법개정으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경제적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철폐하되 사회적 규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하며 국내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고려하여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담합과 일감몰아주기, 하청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 척결 및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 사법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 운영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고발을 전제로 검찰기소가 가능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이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검찰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중대범죄

행위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그 외 위법행위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현행 감사원·조달청·중기청에 의한 의무고발제를 활성화하면 될 일이다. 재벌개혁이니 기업분할명령은 지나치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집단 스스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배구조 개혁이 없다면 해외 글로벌 기업과 고급 전문인력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기업의 투자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경영권은 방어되어야 한다. 지나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셋째, 노동, 공공, 금융, 교육의 4대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성장전략에 불을 지펴야 한다. 지난 정권의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이어가야 한다. 이제는 노동시간 단축, 연봉급 완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단계적 도입, 최저임금 인상, 능력개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따른 등 개별기업 맞춤형의 미시적 노동개혁이다. 의료 간병 건강 금융 관광 문화 환경 등 신서비스와 전통제조업의 융복합을 통한 차세대 성장전략 발굴은 일자리 창출, 격차축소 및 생산성향상의 필요조건이다. AI, 로봇, 3D, 자율자동차, 드론, 빅데이터 등 전략적 인프라 정비를 위한 정부의 선행투자, 정부관련 연구개발기관과 대학의 대대적 재편과 연대는 새로운 혁신생태계를 조성은 스마트화, 플랫폼화, 서비스화, 친환경·저에너지화 등 제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들 선행투자와 혁신생태계 조성이야말로 스마트 주식회사 한국호 CEO의 당연한 통치행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산하 수많은 위원회와 대행기관은 국민 간 정보전달과 이해조정이라는 순기능보다는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 책임소재 불분명, 의사결정 지연 등 역기능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선진국은 오래전 위원회나 심의회 방식을 탈피한 신산업정책으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유턴하고 있다.

넷째,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를 종업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서구에서 이식된 우리 회사법은 분명히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를 통한 거버넌스와 함께 대리인인 경영자의 이윤극대화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주주자본주의가 기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의 자본논리가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이해관계자 간 대립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핵심종업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노조간부를 포함한 핵심 종업원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 오너 독단경영의 폐해에 무력하다. 핵심 종업원은 기업 내 다기능 교육훈련과 승진승급을 통한 고도 숙련노동으로서 기업의 질적성장과 기업 내 공정분배를 양립시키는 인적자본인 셈이다. 이러한 종업원주권이 기업시스템의 근간을 이룰 때 비로소 주주주권과 공유경제도 가능하고 귀족노조 폐단도 시정될 수 있다. 비록 주식배당은 낮더라도 주식장기 보유로 경영권과 고용이 보장됨으로써 기업가치가 상승한 후의 주식매매차익을 고려한다면 결코 주주중심 거버넌스하의 주식단기차익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사실이 실증되고 있다. 일자리와 복지는 진보 측 주장과 같이 사회와 정부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기업시스템 속에 내부화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공공부문도 민영화를 목표로 성과연동제가 도입, 확산되어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부가가치 창출 현장에서 성장성, 민주성, 공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부실 부문이 커지는데도 해고 자유가 없어 본업성장이 가로막히니 국내 청년 실업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협의 없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막무가내 이전해 간다. 기획 연구 개발 등의 전공정 부서는 여전히 조립 생산 물류 유통 등 후공정 부서와 수평적 연대가 아닌 수직관계를 고집하는 갑을의 비민주적 행태 때문에 부가가치 사슬이 망가지고 있다. 원화환율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내부 유보를 통한 연구개발, 품질 향상, 가격 인하로 소비자에 환원하기보다는 오로지 임금인상과 배당으로 자신들 몫을 챙기려는 노사 결탁을 도처에서 목격한다. 개혁 개방도 그 이익이 결국 소비자로 환원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지나

치게 생산자 이익만을 염두에 두었다.

여섯째, 청년세대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하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와 시대를 맞아 연금채무가 쌓여 간다. 저출산대책, 사회보장제도 개혁, 생산성향상 방안을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은 가중되고 부와 교육의 대물림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기본적으로 복지재원은 自助(자기부담)-共助(보험료)-公租(조세)에 의한 분담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중장년 기득권은 자신의 부담은 차세대로 넘기고 급여는 당연한 수급권으로 주장한다. 인구보너스 시대 설계된 연금 건강요양 등 사회보장시스템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표를 잃을 공산이 크지만 해내야 한다. 기득권이 자신의 부담을 국채발행이나 감세 등 재정기능을 통해 미래세대에 전가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꿈을 앗아가는 합법적인 아동학대(Child Abuse)를 자행하는 대의제민주주의 결함을 방치하고 과연 정의를 논할 수 있는가? 청년세대가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 작년 20대 총선에서 2030세대 투표율이 19대에 비해 10% 포인트나 오르고 대신 5060세대 투표율은 하락함으로써 제3당 출현이라는 새로운 정치지형이 가능했다. 다당제의 장단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청년세대의 투표참여가 그들의 열정으로 많은 새로운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선거제도도 유권자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지역구(地域區) 단위에서 유권자의 평균여명으로 가중한 청년구 장년구 노년구 등 연령구(年齡區) 단위로 개혁하여 진정한 1표의 가치를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 결함을 시정해가야 한다.

청년층 사회보험료 인하, 중장년층 연금보험료와 의료비 자기 부담 인상, 연금지급 연한 연기, 소득대체율 점진적 추가인하, 부과방식의 연금재정운영을 적립방식으로, 확정급여를 확정각출로 전환하고 동시에 간병근로자 임금인상, 간병인력 확충, 노인빈곤층 등 지원 확대 등 100세 시대에 걸맞은 '100년 안심사회보장 시스템'을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윗돌 뽑아 아랫돌 메우는 식의

소득세, 법인세 증과보다 부가세의 단계적 인상을 각
오해야 할 때이다. 중복지·중부담은 허상일 뿐이다.

선공후사의 선진통일 지도자 찾아내야

김정은은 플루토늄, 우라늄, 핵융합 3중 동시다발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UN제재는 물론 사드배치도 무
용지물이 될 판이다. 게다가 북의 도발은 북미양자 문
제일 뿐 남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인식아래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사드배치 반대, 개
성공단 재개 등 을 주장하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
는 중북세력의 준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중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북제재의 내용,
수준, 이행절차가 어떤 것이든 우리의 자강, 동맹, 균
세(均勢)전략과 지도자의 통일의지가 분명히 반영됨으
로써 안보주권을 지켜내야 한다. 한국 패싱(Passing)
은 언어도단이다. 한반도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주변4
강의 일부세력에 맞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선진통일은 한민족은 물론 당신네들 국익과도 부합된
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해 내야 한다.

최근 말레이시아가 김정남 살해 진범에 접근해 가는
찰나에 자국민 인질이라는 북 측의 벼랑끝 전술에 굴
복하여 시신에다 살해용의자까지 얹어 맞교환하고 말
았다. 동남아 경제외교 요충지 말레이시아와 공조아래
북의 전방위적 도발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우리의 중견국 외교의 취약성과
국정공백의 민낯을 보고 있다. 이뿐인가. 트럼프 행정
부의 무역제재, 한미FTA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강경노선, 사드배치 결정 후 중국의 일방적인 경제보
복과 무책임한 주한일본대사의 소환과 귀임 직후의 무
례한 외교적 언행 등 통상외교도 사면초가이다. 대부
분의 대선주자들이 한일위안부 재협상을 쏟아내고 있
지만 국내정치만을 의식한 강경발언은 금물이다. 한미
일 동맹강화와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의 양대 비전,
민관의 공공외교정책과 강대국과의 상시구조협의 등
의 전략을 통해 위기의 갈라파고스 한반도를 탈피하고
세계 유일 분단 중진국의 새로운 지역안보와 국제통상

규범을 제시할 비전과 책략으로 맞서야 할 때다. 얼마
전 작고하신 위공 박세일 선생은 "참다운 지도자는 평
소 애민과 수신에 철저하며 시대가치를 앞서 구현할
비전과 책략을 스스로 마련하고, 강호제현을 찾아 그
들과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개혁의 소임이 끝나
면 못다 한 것은 다음세대로 넘긴 후(後史) 표표히 떠
날(回向) 수 있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사전원고 없이
대국민 공약을 자신의 언어로 발표하고 목민관으로 불
림을 받는다면 국정기획과 관리기능은 집권화하지만
집행은 현장에 최대한 위임하는 집권과 분권, 강은전
략을 유연하게 구사하다 임기 후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어 떠나가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갈망한다. 아니
이런 준비와 각오가 없으면 아예 지도자로 나서지 않
았으면 하는 것이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안
고 두 눈 부릅뜨고 한 표를 행사하자.